

5·18 당시 계엄군 등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 규명’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의혹 사건 52건 중 직권·신청 등 19건 조사...3건 ‘불능’ 집단 폭행 확인·피해자 트라우마 불구 가해자 특정 못해

1980년 5월 광주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16건이 규명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한 명도 특정되지 못했다.

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

980년 5월17~21일 사이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은 총 52건이었으며, 이 중 직권·신청 19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16건을 규명했다.

진상 규명된 성폭력은 중복 범죄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 9건 ▲강제추행 5건 ▲성고문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 6건 ▲재생산폭력 3건이다. 피해자 대부분

은 2~3가지 중복 성폭력을 당했다. 재생산폭력은 임신 중 강간으로 인한 임신중절수술, 계엄군 구타로 인한 하혈과 장파열로 장기입원 중 자궁적출 등이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 결정된 16건의 사건 중 피해자 8명은 서둘러 결혼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는 2명(남편 사망 1명 제외)에 불과했다. 결혼을 시도조차 못한 1건과 트라우

마로 인해 마음을 넘겨 결혼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다.

불능 결정이 내려진 3개 사건은 ▲피해 발생 전후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미조사 ▲피해자의 학력 등 기초 사실에 대한 진술 반복(3회) ▲핵심 진술에 등장하는 가족의 소속 기관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나머지 33건은 ▲피해자 사망 후 가족의 조사 거부 ▲피해자 연락처 확보 불가로 인한 조사 중단 ▲조사대상 사건 포함 원치 않음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3년6개월여의 조사 활동 기간동안 사망·자살·정신병 발병 등에 이른 피해자에 대해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5·18 조사위는 1980년 5월18일 당시 금남로에 최초로 투입된 제7공수여단 33세대 28명 중 28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가 대대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작전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작전 계획과 지침, 지시에 의한 시위대 체포, 호송 및 관리 등 수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걸 알아냈다.

조사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단 1건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한편 전원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 규명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국군을 악의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탄소제로챌린지 'EM' 환경교실 2일 광주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 3단지 경로당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질개선 등의 효과를 가진 EM유용한 미생물을 활용, 주방·세탁세제를 만들어 보고 있다. /김애리기자

4·10 총선 광주 북구를 벽보 훼손...경찰 수사

광주 북구 생용동 한 거리에 설치된 4·10 총선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북구 생용동 한 마을 복지회관 인근 거리에 부착된 4·10 총선 벽보가 훼손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벽보는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5명에 대한 것으로 같이 베어 찢어진 듯한 상태였는데,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게 아닌 전체적으로 훼손됐다. /안재영기자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해당 벽보는 지난달 30일경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재영기자

'고수익' 미끼 7억 가로챈 40대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도해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

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B씨에게 받은 투자금 명목의 7억원은 가로챈 혐의다. 직장이 없는 A씨는 식품유통업체 직원을 행세하며 자신의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20%를 수익

금으로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20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성학기자

'사건 브로커' 광주경찰 첫 재판...현직 치안감 혐의 부인

“금품 안 받았다” 주장...승진 청탁 명목 돈 전달한 성씨는 인정 檢, '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1천여만원 추징 구형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광주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제삼자뇌물교부·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기소된 A(58) 치안감과 B(55) 경감, 성모(6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 사실로 "지난 2020년 B경감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고, 성씨는 당시 광주경찰청장이었던 A 치안감에게 전달했으며 실제로 진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대해 A 치안감은 전면 부인했다.

B 경감은 성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그 돈을 A 치안감에게 전달하라며 건넨 것은 아니었다고 일부 부인했다.

반면, '사건 브로커' 성씨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A 치안감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4일 재개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심모(57·구속)씨에 대해 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

천340만원을 구형했다.

심씨는 사건브로커로부터 현금 1천여만 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법 탐포(6·구속기소) 씨를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이날 심씨는 "접대를 받았고 진술 서수정등을 해줬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으나 돈을 받지 않았으며 수사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성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심씨는 접대와 편의 제공 모두 '어쩌다 보니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만 반성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안재영기자

檢, '불법 전화홍보방' 정준호 캠프 2명 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내일 심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홍보방 20여명에게 하루에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후보의 캠프 등에서 압수수색을 한 검찰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2월19~21일 진행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 투표 결과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제치고에 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법 전화홍보방 등 '부정 경선' 의혹으로 윤리감찰 단계까지 거치고 나서야 후보로 확정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 오고 있다. /안재영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